

# 북한의 ICBM 보유 이후 한국의 대응: 1960년대 유럽 사례의 함의

황일도



이 글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매주 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7. 10. 13.**

발 표 **황일도**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토 론 **신범철**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경운** 합동참모본부 중령

발 행 일 **2017년 11월 3일**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집 **고동우 연구원**

디 자 인 **역사공간**

인 쇄 **웃고문화사**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우)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go.kr](mailto:ifans@mofa.go.kr)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 북한의 ICBM 보유 이후 한국의 대응: 1960년대 유럽 사례의 함의

## CONTENTS

문제 제기	01
서유럽 3국의 선택	04
한반도 상황에의 적용: 억제 목표를 중심으로	12
시나리오별 정책 방향	18



---

# 1. 문제 제기

» 2016년 1월 4차 핵실험으로 방아쇠를 당긴 북한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이 종착점을 향해 치달고 있음. 특히 2017년 7월 두 차례 실시된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고각 시험발사와 9월 3일 6차 핵실험으로 미 본토에 대한 핵 타격 능력 확보가 가시화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국내 논의 역시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화성-14형 ICBM 1차 발사 직후인 7월 11일 자 북한 노동신문의 논평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은 ICBM 확보의 군사적 목적이 미국의 전시 증원과 확장 억제 저지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낸 바 있음.<sup>1)</sup>

● 8월 14일 김정은의 인민군 전략군사령부 시찰 당시 등장한 3장의 ‘전략군화력타격 계획’ 지도는 단거리(SRBM)·중거리(MRBM)·중거리(IRBM) 미사일을 혼용해 한반도 남단·주일미군기지·괌 기지를 경유하는 미군 전시증원 전력의 전개를 차단하고, ICBM 타격 능력을 기반으로 핵우산 가동을 차단하고자 하는 북한 핵 억제 교리 진화의 목표지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바 있음.<sup>2)</sup>

» 이러한 최근 한반도 상황과 유사한 역사적 선례는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림으로써 ICBM 기술 보유를 실증했던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바르샤바조약기구(WTO) 군의 막강한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대규모 핵 공격 위협으로 저지한다는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미 본토가 ICBM의 사정권에 포함되면서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음.

1) 해당 논평의 관련 문장은 다음과 같음. “그러나 이제 와서 미국은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공격카드를 뽑아 들기 힘들게 되었다. 이미 내외여론들은 우리가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손에 넣는 경우 미국의 <핵우산>이 찢겨져 나가고 특히 남조선 미국 <동맹>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지금 미국의 처지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2) 본 보고서가 전제하고 있는 북한 핵 사용 교리의 주요 사항은 황일도, 「북한 핵 억제 교리의 진화: 핵 협상에의 시사점」(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23),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7년 6월)을 참조할 것.

---

1960년대 서유럽 주요 국가가 채택한 대응 방식은 ▲NATO 동맹 강화와 핵 사용 결정권 공유를 위해 애썼던 ‘서독’ ▲동맹 탈피와 독자 핵무장을 택했던 ‘프랑스’ ▲앵글로색슨 동맹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독자 핵전력 보유와 NATO 참여를 모두 유지했던 ‘영국’ 등 세 가지 사례가 있어...

○ 서유럽 주요 국가가 이후 10여 년간 채택한 대응 방식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나눌 수 있음. ▲NATO 동맹 강화와 핵 사용 결정권 공유를 위해 애썼던 서독 ▲동맹 탈피와 독자 핵무장을 택했던 프랑스 ▲앵글로색슨 동맹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독자 핵전력 보유와 NATO 참여를 모두 유지했던 영국의 사례가 그것임.

» 상황의 유사성으로 인해 최근 국내의 관련 논의 역시 이 시기 유럽 주요국의 선택을 참고사례로 활용하는 일이 잦으나, 포괄적·입체적 분석보다는 각자가 선호하는 정책적 옵션을 지지하는 근거 삼아 파편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물론 당시 서유럽 상황과 오늘날 한국의 고민이 완벽히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음. ▲유럽과 한반도라는 전장 환경의 차이 ▲소련과 북한이라는 억제 대상의 차이 ▲독자 핵 보유의 가능성으로 상징되는 정책적 선택지의 제한 차이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임.

○ 따라서 어떤 나라의 선택이 한국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선불리 결론짓는 일차원적 접근보다는, 앞서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국가들의 고민이 우리의 정책결정 과정에 줄 수 있는 함의를 추출한다는 목표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다시 말해 한국의 안보 당국에 주어진 다양한 전략적 환경·변수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도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1960년대 서유럽 3국의 대응방식을 되짚어보는 작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음.<sup>3)</sup>

3)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억제 모델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사용하게 될 억제 모델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의 안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큰 틀의 억제 모델을 개념화하는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게 본 보고서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음.

---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당시 주요국의 정책결정이 어떤 구조적 특성과 연원, 전략적 차이를 담고 있었는지 점검하고, 특히 억제 개념 측면에서 드러나는 주요한 변별점을 주로 검토하고자 함. 이를 통해 2017년의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각각의 정책 옵션에 어떤 특성이 있으며, 또 그 선결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따져보고자 함.

---

## 2. 서유럽 3국의 선택

» 소련의 ICBM 능력 확보에 대한 당시 서유럽 3국의 선택은 흔히 독자 핵무장 결정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나, 기실 이는 각국이 채택했던 억제 목표 혹은 억제 개념의 차이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

- 근본적으로 각국은 자신의 지정학적·국내정치적·역사적 여건에 따라 정책결정에 임했으나, 이 과정에서 각자 자신의 처지에 가장 부합하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해 관철해나갔음. 요컨대 ‘미국의 핵우산을 흔들고자 시도하는 소련의 군사력 확장에 맞서 어떤 억제 방식을 택해야 자국의 안보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선택하는 과정에 가까움.
- 특히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억제 개념의 차이가 서서히 분화되기 시작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어떤 종류의 도발 가능성도 사전에 봉쇄해 전쟁의 발발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사전억제(pre-war deterrence)’와 ▲재래식 분쟁이 발발한 후에도 핵 교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소멸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회피하는 ‘전쟁 중 억제(intra-war deterrence)’의 차이가 대표적임.

### 가. 프랑스

» 주지하다시피 당시 프랑스의 선택은 그간 비밀리에 진행해오던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해 독자 핵무장에 나서는 것이었음. “미국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것인가”라는 드골 대통령의 유명한 질문은 핵우산에 대한 당시 프랑스의 의구심을 압축적으로 보여줌.

- 이 시기 프랑스가 채택한 핵전략 ‘비례억제(Proportional Deterrence)’는 상대가 어떤 무기로 공격하든 관계없이 자국이 위협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모스크바에 즉시, 한꺼번에 퍼붓겠다는 것이었음. 자국이 보유한 핵전력이 소련을 초토화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지만, 이 경우 소련 역시 유럽은 물론 미 본토에도 핵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미국 역시 전략핵으로 보복하게 될 것이므로 전 세계의 공멸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음.

● 다시 말해 이는 소련에 대한 ‘군사적 억제’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핵우산 강제’의 의미도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었음. 유럽에서의 재래식 전쟁이 미 본토를 포함하는 대규모 핵전쟁으로 즉각 비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그 초점임. ‘누구든 프랑스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그 순간 소련도 미국도 멸망하는 상황을 만들겠다, 프랑스는 그럴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었음.

● 이에 따라 프랑스는 소련 혹은 WTO 진영 전체를 초토화시킬 막강한 핵전력을 구축하는 대신, ‘미·소 핵 교전의 방아쇠 구실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력을 확보하는 데 그쳤음. 전략핵잠수함(SSBN) 3척에 장착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지상발사 S-3 중거리 미사일, 미라지 전폭기, 항공모함 등을 활용해 48~240기의 전략핵이 냉전 기간 프랑스 핵전력의 요체였음.

» 프랑스의 이러한 억제 전략은 일차적으로 영토적 완결성(territorial integrity)을 중시하는 프랑스의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적 특성과 관계가 깊음. 여기에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드골 행정부의 정치적 지향점이 맞아떨어지면서 확장 억제에 대한 불신과 독자적 결정권을 강조하는 정책적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음.

●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구축된 ‘마지노선(Maginot Line)’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프랑스는 흔히 ‘1000km 육각형(Hexagon)’으로 불리는 영토적 완결성을 수호하는 데 강하게 집착하는 군사 전략 특징을 보여 왔음. 더욱이 1950년대 이뤄진 베트남에서의

프랑스가 채택한 핵전략 ‘비례억제’는 상대가 어떤 무기로 공격하든 관계없이 자국이 위협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모스크바에 즉시, 한꺼번에 퍼붓겠다는 것으로 ...

---

패배와 알제리 독립 등으로 국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음에 따라 이러한 특성은 한층 더 강화됐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프랑스의 이러한 억제 개념은 이후 재래식 전쟁의 핵전쟁으로의 비화를 저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게 되는 NATO의 유연반응(Flexible Response) 전략과 양립할 수 없는 모델이었음. 이에 따라 프랑스는 1969년 NATO 군사기구에서 발을 빼고 정치 동맹만을 유지하게 됨. 애초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자리하고 있던 NATO 동맹군사령부가 벨기에로 이전하게 된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였음.

● 다만 이러한 행보에도 프랑스가 유사시 미국과의 군사적 협조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음. 예컨대 냉전 시기에 걸쳐 프랑스는 WTO와의 핵 교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군 핵 보복 능력과 자신들의 핵 보복 능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NATO 정치기구 차원에서 유지해왔음.

## 나. 서독

» 서독의 선택은 프랑스와 상당한 차이를 보임. 세계대전 전범국이라는 이유로 재래식 군사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주변국의 반발을 피할 수 없었던 서독에 독자 핵무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길이었고, 따라서 미국 핵무기의 사용권에 대한 관여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하게 됨.

●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절의 대량보복 전략이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 확산과 함께 위기에 처하자, 1960년대 초부터 케네디 행정부와 로버트 맥나마라 당시 미국방부 장관은 유연반응 전략을 입안해 신뢰성 강화에 나섬. 서유럽에서의 전쟁 수행을 크게 ‘재래전-전술핵-전략핵 사용’의 3단계로 나눠 문턱(threshold)을 설정해놓고, 상대의 반응과 전황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한다’는 골자임.

○ 유연반응 전략의 채택 과정에는 서독을 중심으로 하는 NATO 내부 회원국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중요하게 작동했음. 보다 현실성 높은 전략을 통해 미국의 방어 공약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전쟁 발발 가능성 자체를 줄인다는 의미와 함께,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 유럽 전장에서의 물리적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신중한 확산(deliberate escalation)’을 모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다는 게 그 골자였음.

○ 논의 초기 서독은 미 대통령이 독점적으로 핵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구조를 깨고 ▲NATO 동맹국이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 ▲각국 병력이 수상함 등의 핵 투발 플랫폼을 함께 운용하는 다국적군(MLF: Multilateral Force)을 추진하는 등 유럽 전장에 배치된 미군 핵무기에 대한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분점할 수 있는 체제를 모색함.

○ 그러나 관련 논의가 이렇다 할 결실을 맺지 못하고 미국이 독점적 핵 사용 결정권을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이후에는 NATO 회원국이 미국의 핵사용 작전계획(OPLAN) 검토와 실행에 참여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선회함. ▲NATO 핵계획그룹(NPG: Nuclear Planning Group)의 창설이나, 미국 전술핵을 유럽 주둔 미군기지에 배치해두었다가 유사시 유럽 국가 공군기에 탑재해 폭격하게 하는 ‘핵 공유(Nuclear Sharing)’ 메커니즘은 모두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었음.

» NATO의 성실한 동반자가 됨으로써 안보 위협을 최소화하려 시도했던 서독의 이러한 선택은 우선 독자 핵무장이 국내적·국제적 여건으로 인해 불가능했던 이유가 크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련이 서유럽을 침공할 경우 가장 먼저 전장이 되는 지정학적 요인도 상당 부분 작용했음.

유연반응 전략의 채택 과정에는 서독을 중심으로 하는 NATO 내부 회원국들의 요구가 중요하게 작동했는데,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 유럽 전장에서의 물리적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신중한 확산’ 모색 원칙이 명확히 반영돼...

- 프랑스가 동유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것과는 다르게, 서독 영토는 NATO와 WTO 사이에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경우 WTO 지상군의 잠재적 진격 루트였음. WTO 군의 재래식 침공을 NATO 측이 전술핵 투사로 저지하려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서독 영토가 주요 타깃이 될 공산이 컸음. 요컨대 프랑스와는 달리, 전쟁 발발 자체를 막는 일도 중요하지만 재래식 전쟁을 가급적 전술핵 교전으로 확전시키지 않는 것 역시 ‘독일 민족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었음.
- 유럽 미군 기지에 미군 전술핵을 배치하되 유사시 운반 및 투하는 유럽 각국이 담당한다는 NATO 핵 공유 체제 역시 이러한 우려와 일정부분 관련이 있음. 해당 전술핵무기는 미국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활성화되지 않는 체계니만큼 ‘미국이 반대하고 유럽 국가들은 사용을 원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큰 의미는 없었지만, 거꾸로 ‘미국은 원하나 유럽은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핵 사용을 저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음.

WTO 군과 지리적으로 떨어진 프랑스가 ‘방기의 공포’만을 경계하며 극단적 억제 전략을 공식화했던 것과 달리, 동구권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서독으로서는 소규모 갈등이 전면전으로, 다시 재래전이 전술핵 교전으로 번지는 상황을 통제하는 작업도 중요하게 작용해...

» 이렇듯 당시 서독의 입장은 ‘방기의 공포’와 ‘연루의 공포’를 모두 신경 써야 하는 기묘한 측면이 있었음. WTO 군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프랑스가 방기의 공포만을 경계하며 극단적 억제 전략을 공식화했던 것과 달리, 동구권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서독으로서는 소규모 갈등이 전면전으로, 다시 재래전이 전술핵 교전으로 번지는 상황을 통제하는 작업도 못지않게 중요했음.

- 케네디 행정부의 유연반응 전략은 미국과 유럽을 막론하고 군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비판을 받은 바 있음. 이러한 전략이 과연

실제 전장에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NATO와 WTO가 서로 암묵적인 합의 하에 재래전을 핵 교전으로 비화시키지 않도록 ‘자제해가며’ 전쟁을 수행하는 일이 과연 가능

---

하겠느냐는 것이 그 골자였음. 이렇듯 오랜 기간 이어진 실효성 논쟁에도 NATO가 최종적으로 이를 채택, 운용하게 된 데는 앞서 본 서독 등의 미묘한 처지가 주요하게 작용했음.

## 다. 영국

» 1952년 이미 첫 번째 핵실험을 진행했던 영국은 프랑스·서독에 비하면 소련의 ICBM 능력 확보에 대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입장이었음.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미국의 핵 개발 과정에서부터 기술협력을 제공했고, 그 반대급부로 일찍이 자체 핵무장을 마무리했음.

○ 이러한 영국의 독특한 지위는 근본적으로 ‘앵글로색슨 동맹’이라는 미·영 관계의 특수성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움. 1952년 첫 핵실험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어떠한 미국과의 줄다리기를 통해 고유 핵 능력을 확보했고, 1949년 NATO가 결성된 이래 성실한 협력자로서 의무를 다했음. 그 결과 미국과 영국은 제3국을 대상으로 핵을 사용할 경우 서로 미리 협의한다는 유일무이한 공식 협약을 비밀리에 체결하기도 했음.

» 그러나 소련의 ICBM 능력 확보 이후 영국 또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일정 부분 회의를 품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음. 이에 따라 영국은 애초 독자적인 투발 수단 확보를 위해 자체 SLBM 개발에 나서지만 기술적 한계에 봉착했고, 대신 다시 한 번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기로 결정함.

○ 그 결과 영국은 미국이 개발한 ‘플라리스’ SLBM을 도입해 자국이 생산한 핵탄두를 장착한 뒤 역시 자국 해군 잠수함에 장착하는 최소역제 전략을 채택함. 근본적으로 이러한 전력은 NATO 동맹군에 배속되고 통합 작전계획에 의거해 운용되지만, 유사 시에는 영국이 독자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열어두는 이중적 행보였음.

○ 이러한 영국의 선택 또한 유럽 대륙에서 떨어져 있는 지리적 위치와 관계가 깊음. WTO 군의 대규모 지상군 침공이나 전술핵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으므로, 자국이 소련의 중·장거리 미사일로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모스크바를 보복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작업에 전력을 집중할 수 있었음. 그에 따라 영국은 소련의 조밀한 방공망을 뚫고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핵 장착 SLBM만을 위주로 핵 억제력을 구축하는 극단적인 방식의 최소억제 교리를 채택했음.

영국은 프랑스와 달리 독자적으로 핵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교리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지 않고, 그러한 개연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만을 암묵적으로 시사할 뿐, 공식적으로는 NATO 혹은 미국과의 공동보조 속에서 핵 사용을 결정한다는 형식적 원칙을 반복적으로 밝혀 ...

» 다만 이 시기 영국은 프랑스와 달리 독자적으로 핵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교리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한 적이 없음. 그러한 개연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만을 암묵적으로 시사할 뿐, 공식적으로는 NATO 혹은 미국과의 공동보조 속에서 핵 사용을 결정한다는 형식적 원칙을 반복적으로 밝혔음.

○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공개된 문서를 통해 당시 영국 또한 미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음이 확인된 바 있음. 특히 소련이 개전 초기 런던에 전략핵 공격을 가해 국가 지도

부를 일거에 제거하거나 통신이 차단되는 경우, 각 핵잠수함이 자체적 판단에 따라 모스크바에 대한 핵 투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둔 매우 공격적인 방식의 운용 교리를 마련했다는 사실 역시 드러난 바 있음.<sup>4)</sup>

○ 결국, 이 시기 영국의 핵전략은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강력한 협력에 기반을 두되, 암묵적으로는 별도의 선택지를 열어둔 형태라고 정리할 수 있음. 이를 통해

4) Shaun R. Gregory, "2. Nuclear Command and Control in NATO," in Nuclear Command and Control in NATO: Nuclear Weapons Operations and the Strategy of Flexible Response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1996). pp. 51-79.

---

NATO가 제공하는 외교적·군사적 이익과 독자적 선택지가 제공하는 억제 효과를 동시에 노린 이중적 행보였음.

### 3. 한반도 상황에의 적용: 억제 목표를 중심으로

» 북핵 위협이 현실화된 이후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거론된 군사적 대비 태세 재고 방안은 앞서 본 세 나라의 선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현실적 한계에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독자 핵무장론’은 프랑스의 선택을 차용한 것에 가깝고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하는 확장 억제 신뢰성 강화 조치는 서독의 모델과 흡사하며 ▲유사시 단기간에 핵을 전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 체제 강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행보는 영국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최근 논의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1960년대 유럽 국가들의 선택이 각자가 가진 억제 목표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임. 이는 한국의 경우도 먼저 어떠한 억제 개념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실제의 정책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함.

● 앞서 보았듯 프랑스는 소련군이 자국 영토에 한 발짝이라도 들여놓으면 핵 공멸로 이어질 것이라 위협함으로써 아예 전쟁 방지 자체에 집중하는 ‘사전억제(pre-war deterrence)’만을 목표로 삼은 반면, 서독과 영국은 개전 후에도 전략핵 단계로 확산되는 일을 막아 전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쟁 중 억제(intra-war deterrence)’에 주안점을 두었음. 다만 서독과 영국의 차이는 마지막 순간에 독자적으로 가동할 응징역제 능력을 보유하느냐 여부에서만 차이가 난다고

프랑스는 소련군이 자국 영토에 한 발짝이라도 들여놓으면 핵 공멸로 이어질 것이라 위협함으로써, 아예 전쟁 방지 자체에 집중하는 ‘사전억제’만을 목표로 삼은 반면, 서독과 영국은 개전 후에도 전략핵 단계로 확산되는 일을 막아 전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쟁 중 억제’에 주안점을 뒀...

정리할 수 있음.<sup>5)</sup>

○ 이러한 개념적 차이는 최근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음. 유사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이 어떤 옵션을 택할지 역시 두 가지 억제 목표 가운데 어느 모델에 무게를 실을 것인지에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고 할 수 있음. 요컨대 ▲초기 보복의 수위를 최대한 키워 위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아예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식과 ▲개전 이후에도 위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 사이의 선택임.

## 가. 최근 국내 논의 재검토

»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논의는 이들 선택지 가운데 일부를 잘라내어 조합한 형태에 가까움.

○ 예컨대 2016년 9월 5차 핵실험 이후 한국군 당국이 공개한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전략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평양 등 북한 수뇌부를 제거할 수 있는 참수(decapitation) 능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해 위협함으로써 아예 도발 자체를 감행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를 골자로 하고 있음.

○ 도발 시 북한이 치러야 할 비용(cost)을 극대화함으로써 억제 효과를 도모하는 이러한 방식은—최소한 외부에 비치는 모습만 놓고 판단하자면—개념적으로 프랑스의 비례억제와 매우 유사한 논리 구조로 되어 있음. 특히 한국이 독립적인 대규모 보복 능력을 확보할 경우 북한의 계산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가 제시했던 이원적 억제의 개념과 맥이 닿아 있음. 다만 핵 대신 재래식 고풍탄을 장착한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대규모로 투사함으로써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로

5) 유사한 규모와 성격의 핵전력을 보유했던 프랑스와 영국이 서로 다른 억제 개념을 택했다는 사실은 특정 전력의 보유 여부가 반드시 특정 억제 개념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함. 달리 말해 한국의 핵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억제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함.

사료됨. 한마디로 ‘독자 핵무장을 재래식 전력으로 대체한 프랑스 모델’이라고 요약할 수 있음.

● 반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한·미 간의 관련 협의를 강화하고 전략 폭격기·핵잠수함 등 미군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를 강화한다는 정책 방안은 기본적으로 동맹 협의를 통한 핵우산 신뢰성 강화라는 점에서 서독의 선택과 흡사함. 다만 이 역시 유럽과 한반도의 전장 환경이나 달라진 기술적 특성 등을 감안해 전술핵 배치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증가로 대체하려는 ‘제한적 서독식 모델’로 요약할 수 있음.

●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논의는 동맹을 통한 핵우산 신뢰성 강화와 독자적 억제 능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노린다고도 할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상충하는 억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억제 효과가 감소될 수 있는 개연성도 숨어있는 것이 사실임.

‘사전억제’ 모델과 ‘확전 통제’ 모델 사이에는 하나를 강화하면 다른 하나가 약화되는 교환관계가 있는데,

▲ ‘사전억제’에 집중할 경우 북한의 초기 도발이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고, ▲ 거꾸로 ‘확전 통제’에 집중할 경우 재래식 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어 ...

» 억제 이론이 정립해온 공리에 따르면, 이들 두 억제 모델 사이에는 하나를 강화하면 다른 하나가 약화되는 교환관계(trade-off)가 있음. 사전억제에 집중할 경우 북한의 초기 도발이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고, 거꾸로 확전 통제에 집중할 경우 재래식 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딜레마임.

● 프랑스 모델의 핵심은 상대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지도부에 대한 대규모 공습 등 압도적 보복 공격이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있음. 이러한 모델은 상대가

애초에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일단 선을 넘고 나면 북한으로서는 즉각 핵을 포함해 보유한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확산시키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계산을 낳게 됨.

---

○ 예컨대 '서울에 미사일이 떨어지면 김정은은 죽는다'고 믿게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미사일이 떨어질 확률은 줄겠지만, 일단 한 발을 쓰는 일을 피할 수 없을 바에야 아예 대규모 핵 공격으로 시작하는 일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는 의미임.

○ 반면 서독식 모델은 상대가 방아쇠를 당긴 후에도 그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대응함으로써 확전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는 일에 상당한 무게를 둬. 이 경우 양측 모두 일정 수위를 넘지 않으면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예컨대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통해 전쟁의 피해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묶어두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임. 따라서 전쟁이 벌어진 후에도 공멸은 피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낮은 수위의 도발은 오히려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역설이 발생함.

○ 예컨대 '아무리 도발을 해도 김정은은 죽지 않는다'면 평양으로서는 더 쉽게 제한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게 된다는 문제가 있음. 더욱이 이러한 전쟁 수행 방식에서는 일원화된 전장 통제를 통해 우발적 확전을 피하는 일이 관건이므로 프랑스식 '이원적 억제'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움.

○ 가장 큰 딜레마는 이들 두 모델이 서로 억제 효과를 상쇄한다는 사실임. 아무리 대규모 보복 공격을 공언해봐도 우리 측이 '신중한 확전'을 더욱 중요한 목표로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낮은 수위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는 충분히 실현될 수 없음. 거꾸로 아무리 확전 방지 및 피해 최소화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해도 초기에 대규모 보복에 나설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상대로서는 소규모 충돌을 최대한 빨리 전면전으로 비화시키는 편이 유리함.

» 외견상 두 가지 억제 목표가 모두 우리에게 긴요해 보이지만, 두 개념이 가진 상충성으로 인해 모두를 한꺼번에 극대화하는 억제 모델은 존재하지 않음. 원론적으로 미국 역대 행정부의 핵전략 역시 이들 두 가지 목표 사이를 큰 폭으로 오가며 진화해왔을 뿐, 둘을 동시에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모델은 고안된 적이 없음. 각자의 처지와 여건에 따라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둘지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는 의미임.

○ 도식적으로 풀이하자면 이러한 선택은, 한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독자적 응징 보복 능력을 전쟁의 어느 시점에 투사하느냐의 차이로 요약할 수 있음. ▲아예 전쟁 자체를

차단하는 일이 중요하다면 프랑스처럼 개전 초기에 평양 수뇌부에 대한 참수 작전을 포함해 대규모 응징 보복에 나서는 교리를 반복해 강조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핵전쟁으로의 비화를 막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면 서독처럼 독자적 응징 보복 능력 구축을 포기하거나, 영국처럼 일단은 동맹 차원의 신중한 확전에 보조를 맞추되 최후의 순간에 확장 역제가 작동하지 않는 순간에 독자적 응징 보복 전력을 가동하겠다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가능함.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가동 시점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억제 목표 중 어느 한쪽도 충실히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에 딜레마가 숨어 있음. 모호성을 유지해 북한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불안정성의 증가로 억제라는 궁극적 목적 자체가 흔들릴 개연성이 훨씬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나. 선결 과제의 중요성

≫ 이렇게 놓고 보면, 1960년대 유럽에서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함. ICBM 보유 이후 북한에 대한 억제 전략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도발 개연성 최소화’와 ‘확전 통제를

통한 전쟁 피해 최소화’라는 상반된 두 목표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고, 그 결론에 맞게 전력 구조 및 외교적 노력을 일관된 형태로 재편하는 작업이 선결과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도발 개연성 최소화’와 ‘확전 통제를 통한 전쟁 피해 최소화’라는 상반된 두 억제 목표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이뤄지는 전력 강화는 필연적으로 어느 하나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약점으로 귀결될 공산이 있어...

● 상반된 억제 목표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이뤄지는 전력 강화는 필연적으로 두 목표 중 어느 하나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약점으로 귀결될 공산이 작지 않음. 특히 한반도의

---

지리적 특성이나 전장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논의가 진행된다면 억제 효과의 극대화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더욱이 한반도의 경우 유럽과 달리 북한의 국지 도발이 상시로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험성이 한층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두 목표 중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질 경우, 평양이 ▲도발에 대한 남측의 대응 의지를 과소평가하게 하거나 ▲소규모 충돌을 순식간에 대규모 전면전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오도(誤導)된 인식을하도록 허용할 수 있기 때문임.

» 유럽에서의 사례를 다시 짚어보면, 이러한 선택은 안보 당국 내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음. 근본적으로는 수백만의 인명 피해 혹은 국가 전체의 절멸 여부를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하는 문자 그대로 국가적 과제임. 프랑스와 서독, 영국에서 각각의 옵션을 결정한 것은 국가 최고 지도자와 유권자의 위임을 받은 의회의 토론을 통해서였음. 북핵 대응 안보 태세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현재의 논의가 앞서의 쟁점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

## 4. 시나리오별 정책 방향

▶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억제 목표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방향성 역시 함께 달라짐. 특히 이 과정에서는 ▲독자적 핵무장의 가능성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미동맹의 견고성을 유지하면서도 ▲억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이러한 쟁점이 동맹 문제와 긴밀히 얽혀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프랑스의 경우처럼 독자적 응징 보복 능력을 강화하는 작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를 담당할 독자 전력에 대해서는 미군과 별도의 지휘·결심 체계를 구축해야 함. 반면 서독 혹은 영국처럼 미국과의 핵 협의나 단계별 전략자산 전개에 중심을 두어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미 측과의 철저한 조율 하에 상황에 따라 탄력적이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원칙이 필수적임. 이를테면 NATO 유연반응 전략의 한국식 재구성에 해당함.<sup>6)</sup>

### 가. 제한적 프랑스 모델 채택의 경우

▶ 한국이 프랑스의 선택을 전범으로 삼을 경우 예상 가능한 최대의 난점은 한미동맹과의 긴장 개연성이라고 할 수 있음. 프랑스의 선택은 아예 동맹 군사 기구로부터 탈퇴하는 극단적 결론으로 귀결된 바 있으나,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6) 한반도에서도 미국 측의 기본적 억제 모델은 유연반응 전략과 유사한 확산 통제형으로 사료됨. 주지하다시피 미군의 핵전력은 지역사령부가 아닌 전략사령부(STRAITCOM) 차원에서 통합 운용되는 바, 억제 개념 역시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기본 틀을 사용하되 억제 대상의 특수성과 맥락을 적용하는 정도로 알려져 있음.

불가능한 선택지에 가까움. 따라서 독자적 응징 보복 능력 확보와 동맹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수적임.<sup>7)</sup>

● 북한의 국지 도발에 대응하는 단계에서 한국 측이 독자적 결정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은 그간 미국 측으로부터 다양한 수준에서 견제 받은 바 있음. 특히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당시 한국 정부가 채택했던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 개념에 대해 미국 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된 것 역시 이러한 잠재적 긴장과 관련이 깊음.<sup>8)</sup> 북한의 제한적 도발을 공세적으로 응징 한다는 작전 개념이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한·미 간의 신중한 대응 협의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그 골자였음.

»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당시 프랑스가 활용했던 이원적 억제 개념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환경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잠재적 긴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단초가 열릴 것으로 판단함.

● 프랑스가 사용한 이원적 억제 개념의 골자는 “소련이 핵 사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핵 보복 능력을 동시에 의식한다면 계산식은 한층 복잡해질 것이고, 따라서 억제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sup>9)</sup>

제한적 프랑스 모델을 한반도 상황에 적용할 경우, 한국과 미국이 각각 평양에 대한 응징 억제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북측의 계산을 한층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이 고려해야 할 변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도발 감행 결정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 구조...

7) 이후 논의에 잠재돼 있는 가장 본질적인 쟁점은 ‘암도적 재래식 전력 확충이 과연 핵 옵션과 유사한 응징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일 것이나, 현재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없다는 가정에 의거해 일단 상당한 대체 효과를 갖는다는 전제 하에 논리를 전개하고자 함.

8) 대표적인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Abraham M. Denmark, “Proactive Deterrence: The Challenge of Escalation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Economic Institute Academic Paper Series, December 2011.

9) Lawrence Freedman,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pp. 271-314.

---

● 이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할 경우, 한국과 미국이 각각 평양에 대한 응징 억제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북측의 계산을 한층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이 고려해야 할 변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도발 감행 결정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 구조임. 따라서 한국의 독자적 응징 억제 능력 확보야말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모델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음.

## 나. 제한적 서독 모델 채택의 경우

▶ 확전 통제에 주안점을 두는 서독 모델의 경우, 확장 억제 신뢰성을 현실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름.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1960년대 당시와 현재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롯한 제도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앞서 보았듯 서독이 참여했던 MLF 구상 등 실질적으로 핵 사용 결정권을 분점하겠다는 구상을 미국 측이 수용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음. 더욱이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는 NATO에서의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NPT를 입안함으로써 이러한 핵 사용 결정권의 국가 간 분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았음. ICBM·SLBM의 발달과 함께 역외 핵 투사와 역내 핵 투사의 군사적 차이점이 사실상 사라진 현실을 감안하면 NATO식 핵 공유 체제나 전술핵 재배치의 군사적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음.<sup>10)</sup>

▶ 따라서 서독식 모델이 주는 더욱 현실적인 시사점은 동맹 사이의 확장 억제 협의를 실효성 있게 만드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지난해 이후 안보 당국 내부에서 NATO NPG가 일종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요체가 무엇이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10) 관련한 세부 사항은 황일도, “NATO 핵 공유 체제 재론(再論):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한 함의,” IFANS FOCUS 2017-22K (서울: 국립외교원, 2017년 9월)을 참조할 것.

---

○ 국내에서의 최근 논의와 달리 냉전 당시 서유럽 국가 사이에서는 NATO NPG를 통한 확장 억제 협의에 대해 다양한 회의론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임. 특히 연 1~2차례 개최되는 NPG 각료급 정기회의가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동맹군 사령부의 결정을 추인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 대표적임.

» 오히려 NPG가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받는 유일한 케이스는 1970년대 후반 소련의 SS-20 중거리 미사일 전진 배치에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1977년 NATO는 특별자문그룹(Special Consultative Group)을 결성해 소련과의 중거리 핵전력 감축 협상과 미국 퍼싱-2 미사일과 지상배치순항미사일(GLCM)의 서유럽 배치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이중 결정(Dual-track Decision)’을 채택한 바 있음. 이러한 구상은 이어진 장기 협상 끝에 1987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체결이라는 결실을 낳게 됨.

○ 이러한 성공에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의 집권과 그에 따른 소련 핵전략 변화 등 다양한 국제정치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지만, 제도적으로는 NATO NPG의 특별자문그룹이 고위그룹(HLG: High Level Group)으로 상설화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연차 정기회의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각 동맹국 실무진이 배치된 상시 조직에서 포괄적·창의적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이 확장 억제 협의의 질적 발전으로 귀결됐다고도 할 수 있음.

» 이렇게 놓고 보면 서독식 모델과 확장 억제 협의 강화를 주된 방향으로 설정할 경우 상정할 수 있는 현실적 외교 목표는 전술핵 재배치 같은 하드웨어보다 공동 협의 조직의 상설화라는 소프트웨어 강화라고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전략자산 순환 배치 등의 기존 아젠다를 훨씬 밀도 깊게 논의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련 협상을 위한 군사 기술적 대안

---

서독식 모델과 확장 억제 협의 강화를 주된 방향으로 설정할 경우 상정할 수 있는 현실적 외교 목표는 전술핵 재배치 같은 하드웨어보다 공동 협의 조직의 상설화라는 소프트웨어 강화라고 할 수 있어...

---

---

마련 등 거시적인 정책 목표 마련도 가능하다는 점을 NATO HLG의 선례가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 제한적 영국식 모델 채택의 경우

» 영국식 모델의 핵심은 프랑스식 응징 억제와의 차별화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소규모 도발에도 대규모로 대응한다’는 공언 대신 ‘확전은 동맹의 틀 안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되, 일단 북한의 핵 사용이 임박하면 동맹의 결정 없이도 보복한다’는 원칙을 정립하는 것에 가까움. 다시 말해 독자적 응징 보복 능력을 보유하되 그 가동 시점을 개전 초기 아니라 핵 확전이 임박한 전쟁 중반 이후로 미뤄두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 한반도 환경에 적용하자면 ▲공식적인 억제 목표는 미국과의 견고한 협의를 통해 ‘신중한 확전’ 기조를 유지하는 데 두되 ▲평양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핵 공격을 감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의 동참 없이도 평양 등에 응징 보복을 가해 북한 지도부를 확증 파괴할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보복은 북한의 1차 타격으로 국가 지도부가 절멸한 상황에서도 결정권을 미리 위임해둔 2차 타격 능력을 통해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납득시키는 게 골자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KMPR로 상징되는 독자적 응징 보복 능력을 강화하면서도 ▲이러한 노력이 동맹으로부터의 이탈을 준비하는 것이거나 확장 억제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임을 아님을 설득하는 동시에 ▲공식적으로는 한미동맹 차원의 군사 협의 체계를 밀도 높게 유지하면서 암묵적으로는 독자적 대북 응징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내보내는(signaling) 작업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개전 초기에 참수 작전을 포함한 대규모 응징 보복에 나선다’는 적극적 억제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대규모 응징 보복이 개전 초기 아니라 일정 수준의 확전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이 ▲‘개전 초 핵 사용’ 같은 극단적 확전에 나서지 않도록 억제하고 ▲최후의 순간에도

---

미국의 핵우산과 한국의 독자적 응징 능력을 모두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핵 사용을 끝내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그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음.

○ 이 모델이 가진 가장 까다로운 난점은 이러한 억제 커뮤니케이션을 암묵적인 방식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사실임. 영국이 독자 핵 능력과 SLBM을 활용한 2차 타격 능력을 공공연히 과시할 수 있었던 배경은 앞서 설명한 미·영 동맹의 특수성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음. 한국의 경우 이러한 억제 메시지를 ▲핵무장 없이 재래식 전력만으로 ▲한미동맹과의 긴장을 최소화하면서 ▲북측은 명백한 리스크로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함.

이러한 각각의 과제가 함께 양립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야말로 이 모델이 가진 어려움의 요체라고 할 것임.

○ 더불어 관련한 현실적 한계도 빼놓을 수 없음. 한국의 독자적 응징 보복 능력은 상당 부분 지대지 미사일이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 전력은 개전 초 북한의 공격 능력을 격파하는 킬체인(Kill Chain) 작전의 주요 수단이기도 함. 앞서 설명한 독자 전력의 억제 효과를 끝까지 유지하려면 재래식 교전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들 전력의 상당 부분을 최후 응징 보복 용도로 유보해두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옴. 실제 전장 환경에서 이러한 선택이 가능할지는 상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음.

---

제한적 영국식 모델이 가진 가장 까다로운 난점은 억제 커뮤니케이션을 암묵적인 방식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사실인데, 영국이 독자 핵 능력과 SLBM을 활용한 2차 타격 능력을 공공연히 과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미·영 동맹의 특수성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바, 한국의 경우 이러한 억제 메시지를 ▲핵무장 없이 재래식 전력만으로 ▲한미동맹과의 긴장을 최소화하면서 ▲북측은 명백한 리스크로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해야 ...

---



**CONTRARIA SVNT COMPLEMENTA**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